# ‘역사 전쟁’ 장외 여론전…野 “국정화 관련 예산 협조 않겠다”

## 새정치, 반대 서명·1인 시위…예산·법안 심사 연계 시사

## 새누리 “국회는 민생에 집중” 정쟁 프레임으로 야당 압박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방침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정기국회 파행을 불러올 전망이다. 정기국회 본연의 업무인 예산·법안 심의가 곧 시작될 예정이지만, 야당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예산·법안 심의와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예산과 법안 심의는 일절 협조하지 않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일단은 교과서 국정 전환과 관련된 사안으로만 한정했지만, 전체 예산·법안 심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집필을 맡을) 국사편찬위원회 조직 예산을 원점에서 재설정하겠다”며 “국정화 관련 예산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장외 투쟁’을 통한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다.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 결집,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통수권자가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 아버지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든 총선 여당 승리를 위한 것이든 가장 나쁜 행위”라며 “껍데기를 포장해도 유신독재로의 회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여의도역 주변에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을 호소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광화문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각 시·도당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의원들의 1인 시위도 계속할 예정이다.

야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모든 예산안·법안과 연계하면서 ‘장외 투쟁’에 나설 경우 정기국회는 공전과 파행을 거듭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권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노동개혁 법안과 각종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등의 처리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과 각종 정치관계법의 국회 통과도 어려워지면서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예산안은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12월 1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그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만큼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아예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강도 높은 저지 투쟁에 맞서 반대 논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고 반박하며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에는 역사교과서 오류·왜곡 사례집을 발간하고 세미나와 공청회도 여는 등의 방법으로 야당의 전방위 공세에 맞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교과서 문제는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는 ‘정쟁의 프레임’으로 야당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정교과서 도입 철회를”

광주시의회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광주시의원들은 13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 문재인-천정배-심상정

## ‘국정교과서 저지’ 野 연석회의 구성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신당을 추진중인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이 여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3자 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3일 오후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국회의원 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 구성을 제안했고 문 대표는 이에 동의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표는 오전 심상정 대표를 만난데 이어 오후 천 의원을 만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연쇄 회동에서 심 대표, 천 의원과 이른 시일 내에 연석회의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연석회의 개최시기 등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지난 11일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파괴와 독재부활의 암울한 역사로 끌고 가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수구기득권 세력의 역사독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천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비상대책회의의 취지를 설명했고 문 대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연석회의를 계기로 총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정교과서 개탄스럽다”

###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는 13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2009년 6월 ‘국정 교과서는 독재 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이들이 스스로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면서 독재 국가나 후진국으로 회귀하려고 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역사는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될 성격이 아니다”며 “정부는 특정세력의 정치적 논리를 주입하려는 국정교과서 도입을 중단하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사과와 함께 전면 철회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올바른 역사교육, 국가 미래 위해 중요”

### 朴대통령 국정교과서 입장 발표 후 방미 출국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관련,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방문에 앞서 소집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배경에 대해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6월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현장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해 9월17일 국무회의에서도 “학생들이 보게 될 역사교과서에 역사적 사실관계가 잘못 기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해서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줘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다시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공개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정치권의 ‘이념 논쟁’이 더욱 가열돼 나아가 ‘국론 분열’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대통령이 양자 간 공식방문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것은 2013년 5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지경기자 jkpark@

## 대정부 질문 첫 날부터 ‘국정교과서’ 충돌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3일 정치 분야에 대한 질의에서 여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국론분열 행위라고 성토한 반면 여당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기존 교과서를 바로잡는 교육 정상화 작업이라며 정부 방침을 옹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꾸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는 말이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박근혜 대통령, 딸은 역사쿠데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지경까지 국론 분열 사태를 이끌고 가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지금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마치 40년 전 유신정권의 모습과 똑같다. 잘못된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며 “친일미화 유신찬양을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식민사관도 반대하고 종북사관도 반대하지만 더더욱 무섭고 안 되는 것은 획일사관, 주입식 사관”이라며 “국정교과서의 최종 목표는 식민사관 합리화, 5·16을 혁명이라 하고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많은 국민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도 정부는 친일과 독재의 기록을 삭제하고 미화시키기 위한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며 “일본 아베 정권의 못된 우경화 정책에 따른 역사 왜곡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 힘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야당을 향해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격하하는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라는 것인가. 편향적 이념이 가득한, 사실조차 왜곡하는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배우라고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대안학교의 교과과정 문제점을 거론한 뒤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에 의해 왜곡된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을 갖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는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정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